

[청구인] ○○○

[피청구인] ○구청장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 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6. 2. 청구인에게 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6. 25. 인천광역시 ○구 ○○동 ○○○-○○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관계인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0. 7. 13.경 위 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다. 2015. 2. 6. 이 범죄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쳐 2016. 6. 2. 청구인에게 과징금 26,800,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재판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금포탈이나 부정한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친척관계인 이○○에게 값을 부채를 대신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26,800,000원의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에게 차용한 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로 변제하려 하였으나 오빠에게 신용 상의 문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오빠의 처인 이○○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

유권이전등기할 수밖에 없었고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채무 변제 목적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그러므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금 포탈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닐 경우 과징금 전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경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경조항에 대한 증명책임자 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으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부과청이 과징금 전액을 부과할 수 있다고 판시(대법원 2012. 7. 5. 선고2012두1358 판결)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나. 사실관계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인천지방검찰청장은 청구인이 2010. 6. 25. 인천광역시 ○구 ○○동 ○○ ○-○○ 주택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친척관계인 이○○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고 2010. 7. 13.경 위 이○○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범죄사실을 2015. 2. 6.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위 1)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통보받은 피청구인은 2015. 5. 15. 청구인에게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명의 제출을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2015. 5. 21. 인천지방법원의 판결 이후 입증자료 등을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3) 위 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5. 5. 28.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 판결을 선고받았다.

4) 피청구인은 2016. 5. 2. 청구인에게 「부동산실명법」 제3조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26,800,000원 부과처분을 사전통지하였고 2016. 5. 17. 청구인은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금포탈의 목적이 아니므로 선처를 바라며 2016. 5. 30.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는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5)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6. 5. 30.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2016. 6. 2. 청구인에게 과징금 26,8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판 단

1) 먼저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조는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날 현재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는 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다음으로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살펴보면,

「부동산실명법」 제3조제1항에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인 이○○의 명의로 등기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3,000,000원 판결을 선고받은바 이 사건 위반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이는 임의적 감경규정이므로 위와 같은 감경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과징금을 감경할 것인지 여부는 과징금 부과관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부과관청이 이를 고려하고도 감경하지 아니한 채 과징금 전액을 부과하였더라도 이로써 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두3257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2016. 5. 17.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가 조세를 포탈할 목적이 아니므로 2016. 5. 30.까지 추가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피청구인이 2016. 6. 2.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청구인이 「부동산실명법」 제3조의2 단서에 따라 과징금을 감액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아울러 청구인이 이 사건 위반행위가 세금 포탈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입증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청구인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